

‘尹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둘다 195명 찬성...국힘 이탈표 나와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안도 통과 ‘윤 탄핵안’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위한 시행령 통치·습관 거부권 포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이탈표가 발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김예지,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찬성표 가운데 김재섭, 김예지, 권영진, 한지아 의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83인,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시스

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전날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개입 우려가 제기된다며 야당과 비교협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했다.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

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사건, 명태군 관련 사건 등 김 여사와 관련한 15개 혐의를 다룬다.

14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돼 두 사람의 직무는 정지됐다.

국회는 총 투표수 295인 중 가결 195표, 부결 100표로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도 총 투표수 295인 중 가결 202표, 부결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려는 등 내란 행위 계획 및 실행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조 청장 탄핵 소추 사유로는 경찰력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출입을 차단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지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준명 원내대변인은 “(탄핵 추진) 일정을 당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소추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중간에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뒤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와 위헌적인 습관적 거부권 행사,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 내란과 관련해서는 내용 보강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선관위 “자신이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 자기 부정”

윤 대국민담화 반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담화 발표를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7월부터 9월22일까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보안 점검에 대해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라며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라고 비판했다.

뉴스시스

이재명 “한국 경제, 정치 불안정 피해 없게 최선”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지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어 “왜 매년 희생은 경제

뭉텨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보고 참 가숨이 답답해졌다”며 “기업도 기업이지만 그에 더해 골목상권조차 매우 어려워진 것 같다. 마음이 썰렁해지다 보니 연말 모임도 다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이나 주가나 또는 금융재정 이런 사항들에 대해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저희가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해보자 제안했는데, 정부는 응하겠다고 하지만 여당이 정신없는 상태에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화, 환율 폭등 문제 등을 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국제적 관계가 긴

밀해진 대한민국 경제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고 혼란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종식해야 된다”며 “이게 실질적인 기업의 피해로 이어져 기업 존속이 위협받는다라는 문제가 지고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환율이나 주식시장, 자본시장 문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매우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 자리에서) 현장의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그걸) 귀담아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주교 서울대교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고환율 등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사회 안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2계>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매각물건 | 최저매각가격 | 비고 |
|--------------|------|---|-------------|-------------|
| 2024타경 2775 | 1 | 광산구 우진대로278-11, 101동 8층 801호 [우산동, 우산동한국아파트] 76.7778㎡ | 308,000,000 | 2024타경71283 |
| 2024타경 68119 | 1 | 서구 화은로24, 303동 1층 101호 [화정동,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 84.97㎡ | 568,000,000 | 2024타경4771 |
| 2024타경 68973 | 1 | 서구 월산로255번길24, 1동 4층 402호 60.99㎡ | 123,000,000 | 토지별도기 있음 |
| 2024타경 69662 | 1 | 북구 북문대로150번길11, 102동 2층 202호 [운암동,미리보아파트] 71.715㎡ | 160,000,000 | |
| 2024타경 69686 | 1 | 북구 첨단연신로166, 109동 19층 1901호 [신동동,광주첨단2지구사관아파트] 60.4624㎡ | 260,000,000 | |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 | | | | |
|--------------|---|--|------------|------------|
| 2024타경 69723 | 1 | 광산구 월계로223-19, 제3층 제306호 [쌍암동,한양메드가 1차] 26.36㎡ | 57,000,000 | 57,000,000 |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매각물건 | 용도 | 감정평가액 | 최저매각가격 | 비고 |
|--------------|------|--|----|-------------|-------------|--|
| 2024타경 69150 | 1 | 나주시 반남면 출렁리 4-6 593.1㎡ | 전 | 100,941,920 | 100,941,920 | 일괄매각, 목책1.6 |
| | | 동소 4-8 496.5㎡ | 전 | 100,941,920 | 100,941,920 | 양지상에분도 [광장1기] 소재, 목책1.5 |
| | | 동소 4-9 1492.6㎡ [현황:임야, 현황유류경지 및 임야상대] | 전 | | | 원상복구계획서 제출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 [반남면의사실조 회회의의형] |
| | | 동소 4-11 596.0㎡ | 전 | | | |
| 2024타경 69677 | 1 | 동소 4-13 1075.7㎡ [현황:목책및임야, 지상분묘약 50여기소재] | 전 | | | |
| | | 동소 4-14 333.1㎡ [물건번호:1:맹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목책1~6농지취득자격증명요] | 전 | | | |
| 2024타경 69677 | 1 | 동구 흥남동 5-4 193.3㎡ [지상건물부지와인근숙박시설주차장요이용중] | 대 | 570,235,000 | 570,235,000 | 지상건물매각제외 |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거래수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존상부수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지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청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용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4. 12. 27. (금) 10:00
3. 매각신청기일 : 2025. 1. 3. (금)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에 비치된 기일입찰표를 사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등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한 물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서(계좌)를 제출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관변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거래수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거래수신인인과 차순위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이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일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 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결정일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권을 상실한다. 다만, 매각기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로 유예하며, 따라서 매각권이 상실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권 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기입권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록세영수증통지서를 첨부하고, 주민등록전환발령통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세 영수증, 주민등록전환발령통지서 등 우편발령 인사 통령(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의 주체 또는 참가인원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주된 동쪽면적인지를 하고 그 거주하고 있는 위치인이나, 시정자치청신장을 마친 위치인이 있을 때에는 그 위치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과의 알선에 관계없이 유예에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일,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서본 등을 우편발령 인사 통령(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일에서의 알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공고된 물건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회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알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매각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결정일에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⑥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매각기일 종료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알선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하여 따로 제공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 배상신청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관상하는 물건을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법원 매각결정일에서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유승주